

빨라진尹 탄핵 시계... 정국 '시계 제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3일 밤 전격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제 결의안 통과로 '무효' 야,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오늘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6~7일 표결

'비상계엄'이 또 한 번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전두환 신군부의 '서울의 봄'처럼 총성은 울리지 않았고, 시민과 정치권의 의연한 대처로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했지만 별 사고 없이 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성숙한 한국 민주주의'도 돋보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 등 한반도 정세는 거센 파도 위에 놓이게 됐다.

◇야당,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탄핵 추진 공식화=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과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다. 각종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고,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도 금지했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의원 모임에 지도부 참가도 막았다.

하지만 이번 비상 계엄 파문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전선의 최전방에 설 명분을 얻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 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비상 계엄 사태로 국민의힘 내부 균열 입증...탄핵 동력 얻어>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과정에 국민의힘 내부 균열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점에서 '탄핵 동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당원 계산판 논란을 두고 거리가 멀어진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날 새벽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인 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과정에서 적어도 18표의 국민의힘 반발표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향후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나를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도 할 수 없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월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고, 헌법재판소장조차 권한 대행 신분인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는 각각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 카드 꺼냈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명태군 추가 폭로에 심적 부담 여론·정세에 대한 오판도 한 몫...계엄 준비도 미숙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허술한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돼 탄핵 등 윤 대통령 자신의 정치 생명만 위협받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태군의 추가 폭로', '국회의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국회 삭감에 따른 분노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대응책이 없고,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계엄 관련 담화에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비롯한 아이돌 불수당 384억원,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관련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처방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군 추가 폭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계엄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을 것"이라며 "실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과정에도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세에 대한 오판도 계엄 선포의 한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 민주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대통령의 착각이 계엄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담화에서도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며 국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건희 특검법 불안감과 정세에 대한 오판 등으로 계엄 준비가 미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계엄 실행 과정에 선행해야 하는 '국회의장 공판 봉쇄', '의장 구금', '국회 진입 전력 차단', '국회 내 국회의원 진입 금지'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한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처리에 굉장히 분노한 대통령이 별다른 준비 없이 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어하고 조인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또... 계엄 공포 협산인 5·18도시 광주 ▶2면
비상계엄 선포-해제 '혼란의 6시간' ▶3면
긴박했던 순간-민주주의 지킨 야당·시민 ▶4면
2030 계엄령에 민주주의 소중함 깨달아 ▶5면
비상계엄 실행한 육사 선후배 '4인방' ▶6면
법학자들 "윤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 ▶7면
계엄 소식에 광주·전남 상장사 추가 폭락 ▶8면
세계 각국 외신이 본 한국의 비상계엄 ▶9면
광주FC "광주다운 축구 보여줬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제주 한라산 탐방로 ▶22면

光州日報 2024. 12. 5 목요일 호외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추다

이재명 대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국민 어리석음 국회로" 한동훈 대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조국 대표 "국민 유인안해"-우원식 의장 "헌법따라 조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 4일자 호외 발행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